

박은경,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남주홍,
“재산 30억 원이면
양반인 셈”

유인촌,
“[나보다 부자인]
배용준을 보라”



이동관, “노무현 때
집값 올라서
이렇게 된 것”



이라크
점령과 저항의 5년

3면

이명박과
‘재벌천국’ 시대의 개막

6~7면

3·8 국제 여성의 날
1백주년

12면



국제

- 카스트로와 쿠바
- 미국 대선과 오바마
-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공

3~5면

크리스 하먼

-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8면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자옥’ 정책

6~7면



맑스와 《자본론》 ④

- 자본주의와 경제 위기

9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
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강남대부자 내각이 실용과 선진화인가

3-16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 파병 한국군 철수 · 상사파병법 반대 /
이란 공격 반대 / 한미 전쟁동맹 강화 반대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을 건설하라

일시: 3월 16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인용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정치인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 끔찍한 말을 하는 노무현

“이명박 당선인이 방향을 바꿔 사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것을 제언했다. 뒤처진 사람에 대한 배려였다. ‘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라는 당선인의 평소 철학대로였다.”

— 대변인 이동관이 말한 운동장 거꾸로 달리기 기의 깊은 뜻

“현금 소비 성향이 있었다.”

— 매달 3천만 원 씩 현금을 인출한 이상은 의혹에 대한 이명박 특검의 ‘명쾌한’ 결론

“어느 지역이 좀 살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사를 가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 부동산 투기가 ‘인간 본성’이라는 이명박

“이명박은 ‘워싱턴의 거리낌없는 친구’ … 고교 이후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노무현은 한국어밖에 하지 못하며 그것도 거칠기로 악명 높은 방식으로 구사했다.”

— 〈뉴스위크〉

이동관: “노무현 때 집 값 올라서 이렇게 된 것”

남주홍: “부부가 교수를 25년 동안 했는데 돌이 합쳐 재산 30억 원이면 양반인 셈”

유인촌: “[나보다 훨씬 부자인] 배용준을 봐라”

이춘호: “암 아니라는 기념으로 남편이 오피스텔 사 졌다.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오피스텔 사라고 해서 하나 더 샀다.”

박은경: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의 기막힌 변명들

강영만(고려대 출교생)

지난 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우리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총장 이기수는 천막을 칠 거하는 출교생들을 찾아와 “내가 잘 정리해 주마”라고까지 말한 후 뒤통수를 쳤다.

퇴학 발표 직후 5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본관 앞에 모여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과대, 정경대, 사범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들은 “끝까지 연대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퇴학 결정은 전체 고려대 교수 연수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교수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애초에 보건대 학생들 투표권 인정해 줬으면 이런 일 있지도 않았다”며 비상식적 결정을 한 총장을 비판했다.

사회적 비난 여론도 상당하다. 〈경향신문〉은 “치졸한 꼼수”이며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 쇼”라고 고려대 당국을 비난했다. 방송인 손석희 씨도 새벽 라디오 생방송에서 “제 상식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도 사실을 통해 고려대 당국의 “귀막은 조처”와 “웅졸함”을 비판했다. 물론 〈한겨레〉는 그와 동시에 “잘못을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학생들의 용렬함”도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출교 근거로 밝힌 ‘감금일지’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고려대 재단이 이진희 반대 시위를 출교 이유로 밝힌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패륜 행위’를 했다고 거짓 자백하라는 것이며 진보적 활동을 ‘후회’하라는 것이다. 법원조차 조건 없는 복학을 판결한 마당에 〈한겨레〉



의 입장은 아쉬운 면이 있다.

한편, 총장과 상벌위원장(학생처장)은 상벌위원 중 6명이 “재출교”를 주장했다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출교”를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어윤대 전 총장 시절 상벌위원 보직을 맡아 2년 전 출교를 결정했던 당사자들이다.

고려대 재단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출교된] 7명을 고려대 졸업생으로 만들 수 없다”며 압력을 행사한 듯하다. 이들은 법원의 복학 결정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며 환호한 것을 보고 우리에게 대한 증오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꼼수

우리의 승리가 투쟁하는 노동자·학생들의 자신감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확인했기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학내 연대기구인 ‘출교반대 대책위’는 ‘퇴학철

회·즉각복학추진위원회’로 전환해 연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과대, 사범대, 정경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퇴학 결정을 비판하는 영상이 상영됐고 퇴학 철회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동덕여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생회 활동가 대회 등에서도 퇴학 철회 운동이 소개됐다. 지금까지 34개 단과대 학생회·총학생회와 1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에게 대한 후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퇴학 결정 자체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이라는 진보적 법조인들의 의견에 따라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앞으로도 ‘퇴학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
법적 대응과 장기 천막농성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후원 모금 계좌:
하나은행 391-9101-9567-507
예금주 강영만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 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1년 동안 전혀 취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1주일에 4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57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개미’처럼 일하지만, 취업자의 30.5퍼센트인 7백20만 명은 한 달 임금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은 월급이 2백만 원 미만이었다.

한편, 사교육비실태조사는 공교육 예산을 웃도는 사교육 비용과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7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국가예산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20조 원에 달했다. 2003년의 13조 원(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비해 54퍼센트나 급증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이 부른 끔찍한 결과다.

소득수준별로는 최고층(월 7백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최저층(1백만 원 미만)보다 9배 가량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같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박건희

서울대는 맑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라

한규한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 전원은 퇴임하는 김수행 교수의 후임으로 맑스 경제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 학자인 서울대 경제학부장 이영훈은 맑스 경제학 전공자 채용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당장 맑스 경제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지도 교수를 구하지 못한 채 ‘학문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대학원생들의 행동에는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신자유주

의의 대학 지배가 기업 이윤에 필요한 학문만 ‘특성화’해서 키우고 그렇지 않은 학문들은 고사시키기 때문이다.

텍시기사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학생은 맑스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를 간명하게 밝혔다. “[주류 경제학] 교수들은 수식과 모형에 대해 이야기했지 왜 텍시기사가 자기 몸을 불태우는데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 자체를 직접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맑스 경

제학 전공 교수 자리가 없어지게 될 지경에 이른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1년 넘게 끌어 온 이 과정에서 김수행 교수가 일찌감치 자신의 후임을 맑스 경제학 전공자로 할 것을 경제학과 교수들에게 더 강력히 요구했더라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김수행 교수의 공공연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작업이 일찍부터 진행돼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결합됐다면 주류 경제학 교수진들이 이를 거스르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철저한 도제식 관계로 대학원생들의 진로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을 상대로 더 진전된 집단행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서명운동은 좋은 출발이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진 모두가 주류 경제학자들이고 그들은 맑스주의 전공자를 뽑는 데 매우 적대적이거나 기껏해야 미온적이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행동은 공개적인 집회, 수업거부 등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20년 전 김수행 교수가 서울

대에 임용할 수 있던 힘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수업거부였다.는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경제학부 학부생들도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학부생들의 행동은 대학원생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학부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왜곡해 열버무리는 식의 ‘해결책’을 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채용 대상자를 ‘정치경제학’ 전공자 정도로 몰타기를 해 케인즈주의 전공자를 뽑는 식의 타협 가능성이 그것이다.

맑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서울대 경제학부 대원생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라크 전쟁 5년 — 점령과 저항의 5년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이라크 전쟁은 5년 동안 세계 정치의 지형을 바꿔 놔다.

가장 극명한 변화는 바로 이라크에서 일어났다. 부시는 지난 1월 중동 방문 기간에 “바그다드에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2003년 3월 20일 부시 일당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이라크는 생지옥이 됐다.

의학전문잡지 《랜싯》이 2006년에 내놓은 조사 자료로는 65만 명, 2007년 영국의 〈옵저버〉지가 내놓은 자료로는 1백20만 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다.

이라크 인구의 54퍼센트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이라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이라도 실업률은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사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백3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집을 떠나 난민 신세가 됐고, 또 다른 2백30만 명은 이라크를 떠나야 했다.(이라크 전체 인구는 약 2천2백만 명이다)

부시의 전쟁에 동원된 연합군 병사 4천2백79명이 목숨을 잃었다(2월 26일 현재). 사망과 부상, 전투 스트레스 때문에 참전 군인들의 반전 운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생지옥

그러나 이라크 점령 5년은 저항과 투쟁의 5년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시 일당은 큰 난관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 이후 그 해 8월부터 시작된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부시 점령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부시는 이라크에 대한 공중 폭격을 6배 늘렸고, 지상군 3만 명을 증파했다.

국제적인 반전 운동의 분출 또한 부시의 전쟁에 타격을 입혔다. 2003년 2월 15일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국제 반전 운동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대하게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도미니크 레미에의 조사를 보면, 2003년 1월 3일~4월 12일

에 전 세계에서 3천 번의 항의시위가 열렸고, 약 3천6백만 명이 참가했다.

전쟁 동맹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부시의 전쟁을 지원한 유럽의 ‘악의 축’이었던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스페인의 아스나르는 2004년 3월 일찌감치 권좌에서 쫓겨났다. 또 다른 ‘악의 축’ 베를루스코니도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5년 전 2003년 2월 15일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여들었던 수천 명의 반전 시위 대열은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 운동의 출현을 알렸다.

주요 제국주의 열강도 아닌데다, 친제국주의 군사독재의 오랜 억압 때문에 반전 운동의 전통이 없던 한국에서 이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베트남 전쟁 때도 한국군이 총 34만 명 파병됐고, 5천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 반전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해 7월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한국에서 반전 운동이 등장한 것을 “기적”이라고 평했다.

2003년 한국 2·15 반전 행동

2월 15일 시위의 성공은 3월과 4월 노무현의 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로 연결됐다. 그래서 3월말 국회에서 파병안 통과가 두 차례나 좌절됐다. 반전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 위기를 촉발하는 구실을 했고, 2004년 6월 고(故)김선일 피랍 사태에서는 최대 1만 5천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벌어지면서 파병을 정치의 핵심 의제로 올려놨다.

저항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반전 운동은 새로운 세대를 운동으로 끌어들었다. 2002년 말 여중생 시위와 2003~2004년 반전 시위의 주요 구성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좌파 — NL과 PD — 의 어느 경향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과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국제주의적이고, 개방적이고, 급진적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일부는 새로운 세대의 반제국주의 활동가층을 형성했고, 지금도 대학과 거리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

쟁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반전 운동은 몇몇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한국 반전 운동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2003년 4월 바그다드가 함락됐을 때, 그리고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을 때 전쟁과 파병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싸웠고, 중요한 승리들을 거뒀다.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은 부시 일당이다. 반전 운동의 주장이 옳았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입증됐고, 이제는 반전 운동의 주장이 일종의 상식이 됐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부시는 여전히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공격이라는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새 주인 이명박은 노무현의 파병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여전히 이라크에서는 자이툰 부대가 점령을 돕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군인이 포함된 지역재건팀(PRT)이 파견돼 동의·다산 부대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은 상시파병법을 통과시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병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전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16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3월 16일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일부가 돼야 하고, 이명박 취임 이후 벌어지는 첫 대중 시위의 일부가 돼야 한다.

이미 각 대학의 신입생 수련회에서 반전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저주받은 89년생”이라 불려 온 신입생들은 반전 운동 속에서 자신의 분노와 소외를 표출할 수 있다.

높은 반전 여론 때문에 지금도 대학과 거리에서 반전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활동가들은 다시금 이들이 운동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3월 16일 시위로 연결시켜야 한다. 부시 일당은 이 전쟁을 “상시적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저항과 투쟁도 “상시적”이어야 한다. 3월 16일 부시의 전쟁에 대한 “상시적” 저항이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자.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공은 ‘테러와의 전쟁’의 연속이다

터키군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 공격을 감행했다. 터키의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터키군은 교량들을 파괴하고, 터키와 이라크 국경 지대 마을들을 향해 대규모 포격을 가했다. 또, 도주하는 PKK(쿠르드노동자당) 조직원들을 도와 주는 모든 가정(家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2007년 12월 터키군이 PKK 토벌 작전을 시작하면서 터키 공군은 매일 이라크 북부를 폭격해 왔다.

현재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 지역 25킬로미터 안까지 진출해 PKK 전진 기지들을 포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가 이라크 국경에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터키군의 작전 범위가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PKK는 2천만 명에 달하는 터키 내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터키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성장했다. PKK는 터키 정부에게 반복해서 휴전을 제안했지만, 터키 정부

는 매번 거절했다. 터키군은 이제 PKK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라크 북부가 전장이 된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초래한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터키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시 정부는 터키 정부에게 PKK 소탕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이라크 점령군의 핵심 동맹인 이라크 쿠르드족 정당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까 봐 걱정했다.

이라크에 사는 터키계 소수민족인 투

르크멘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정당들의 종족청소 대상이 됐다. 쿠르드족 정당들은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에서 다른 종족을 몰아내려 한다.

터키 내 쿠르드족은 터키군의 이라크 북부 침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스탄불과 다른 대도시들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들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월 25일 시위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경찰 장갑차에 치여 죽었다.”

지난주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피델 카스트로는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거의 50년 동안 카스트로는 강대국 미국의 의사를 거슬렀고, 쿠바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살아남았다. 쿠바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반제국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쿠바는 다른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쿠바는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던 국가들 가운데 1990년대 초 소련 블록 붕괴를 이겨낸 극소수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카스트로의 사임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었다. 언론들은 쿠바가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길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카스트로의 사임과 함께 변화가 올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지난 50년 동안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여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로의 쿠바를 찬양해 왔다. 그러나 쿠바는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원래 카스트로는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자도 아니었다. 카스트로는 쿠바의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정통주의당[1947년 창당된 쿠바 민족주의 정당]의 당원이었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이 당의 청년 당원들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동안 미국이 지원하는 풀헨시오 바티스타 장군의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급진화했다.

카스트로는 무장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1953년 카스트로는 쿠바 제2의 도시인 산티아고 소재 몬카다 병영을 공격했다.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카스트로가 이끈 게릴라 단체 ‘7·26운동’은 다른 반(反)바티스타 단체들처럼 잔혹하게 탄압당했다. 카스트로는 법정에서 감동적인 변호 연설을 했지만 투옥됐고 나중에 멕시코로 추방됐다.

쿠바 망명객들은 망명지에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했고 군사 훈련을 했다. 나중에 아르헨티나 출신 순회 의사인 에르네스토 체게바라가 여기에 동참했고, 그들은 1956년에 고작 수십 명의 병력으로 쿠바를 침공했다.

이 게릴라군은 산으로 들어갔지만, 7·26운동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사보타지[파괴공작], 암살, 선동을 통해 저항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이 운동의 축은 점점 게릴라전으로 옮겨갔다. 특히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게릴라 전략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곧 바티스타에 맞서는 급진 반정부파들 사이에서 지배적 세력이 됐다.

게릴라

1958년 말에 이르러 대중적 불만이 크게 고조되면서 당황한 미국 후원자들은 바티스타를 내버렸다. 카스트로의 군대가 산에서 내려와 도시들을 포위하자 쿠바 군대는 게릴라들과 싸우기를 거부했고 와해돼 버렸다.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는 쿠바를 떠났다. 카스트로의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수도 아바나로 진입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승리한 이유는 게릴라 전략이 옳았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1986년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카스트로와 쿠바

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후에 ‘쿠바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들은 모두 재앙으로 끝났다.

당시에 카스트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애써 강조했다.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이 적색이 아니라 황록색(게릴라 위장복의 색깔)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카스트로가 소련과 가까워진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때문이었고, 그 후로 미국 정부에게 카스트로는 눈엣가시였다.

물론 당시 쿠바 대중은 게릴라 군대를 지지했고, 이 군대가 위로부터 건설한 국가 기구도 지지했다. 그러나 7·26운동은 토지 점거를 비난하고 노동조합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했다.

그 정부는 ‘민중의 정부’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정부’였다. 정치 권력은 7·26운동의 수중에 있었다. 7·26운동은 강철 같은 규율과 위계를 강조했는데, 이런 조직 방식은 이 운동이 비밀 군사조직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비록 쿠바 민중은 1959년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했지만, 초기 카스트로 정부는 의료, 교육, 문맹, 실업 문제 등에서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쿠바의 부자들은 이런 개혁들을 참을 수 없었고,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도망갔다. 그들은 미국이 곧 카스트로를 몰아내 자신들이 쿠바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신생 쿠바 정부를 승인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바티스타가 쫓겨난 것은 아쉽지 않았지만, 코앞에 있는 정부가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두고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국 정부는 카스트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은 쿠바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정제를 거부했다. 쿠바 정부는 이 기업들을 국유화했고, 다른 쿠바 기업들도 곧 국유화했다.

1961년 CIA가 지원한 피그만(灣) 침략

은 실패했고,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더 굳건해졌다. 미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시작된 미국 기업들의 경제 보이콧은 나중에 완전한 경제 제재로 확대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카스트로는 냉전 시대 전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택한 길을 따랐다. 즉, 그는 하나의 초강대국이 자신을 위협하자 다른 초강대국인 소련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이고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카스트로의 움직임에 환영했다. 미주 대륙에 교두보를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소련의 ‘의무’는 철저히 소련의 이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쿠바와 소련의 이익이 충돌하면 쿠바가 일방으로 양보해야 했다. 많은 쿠바 지도자들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종결시킨 미국과 소련 정부 사이의 협상에서 쿠바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의존

카스트로의 동료 지도자들 사이에서 쿠바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구조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이르면 이 논쟁은 종결됐다. 쿠바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에 의존해야 했다.

쿠바는 경제 다변화 계획을 포기하고 전통적 수출 상품 — 특히 사탕수수 — 에 다시 의존하게 됐다. 쿠바는 소련의 공식 위성국가가 됐다. 심지어 아프리카 몇몇 곳에서 소련 대신 대리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어떤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산당 지도자들의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과 그들만을 위한 시설 등 공산당 일당 국가에 존재하는 특징들이 모두 쿠바에서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과거 독재 정권의 만행과 1960년대 초반 개혁 조치들을 기억하는 쿠바 민중은 여전히 카스트로 정권을 방어하고 지지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쿠바는 경제·정치 위기에 빠졌다. 쿠바인들은 쿠바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쿠바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노출되면서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다.

관광업 같은 특정 산업은 호황을 누렸지만, 다른 산업들은 그러지 못했다. 또, 관광업으로 일부 쿠바인들은 외환을 얻을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못했다. 사회 불평등이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오늘날 쿠바 경제는 이른바 ‘사회주의 천국’과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암시장이 번성하고 관광업과 연관돼 성매매 행위가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쿠바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쿠바가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쿠바 같은 정권들은 ‘위로부터’ 다양한 진보적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대체

오바마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애비게일 바칸

캐나다 퀸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맑스주의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열풍이 몰아치면서 그동안 주류 정치에서 소외됐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대통령 오바마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설사 오바마가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 예비선거와 당원대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의 지지자들 중에는 빈민 · 청년 · 흑인 · 이주민 · 여성 등이 많다. 그들 중 다수는 선거 정치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가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오바마나 민주당의 정치는 이런 열풍에 걸맞은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바마와 그의 선거 조직자들은 잠재적 지지자들의 성격에 맞춰 절묘한 선거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지지자들에게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자들보다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오바마는 이메일과 유튜브를 이용해 광범한 청년층에게 접근하고 있다. 오바마의 이런 방식은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의 메시지는 내용은 빈약하지만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는 매우 명료하고 열정적인 언어로 미국 정치가 부시와 그 일당들이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거듭 말한다. 여러 웹사이트에 게재된 오바마 연설 비디오를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공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후계자를 자임한다. 그를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바마는 각종 연설과 자서전에서 자신의 혼혈 · 다문화적 배경이 ‘새로운 미국’의 상징인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는 평화를 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의 사례를 보자.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사실, 민주당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나 지금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존 에드워즈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미국 대중의 뿌리 깊은 반전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배계급 안에서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오바마는 클린턴이나 에드워즈와는 달리 자신은 처음부터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불법적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말한다.

2004년 미국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오바마는 2005년과 2006년에 이라크 전비를 조건 없이 승인해 달라는 부시의 요청을 지지했다.

이라크 전쟁

또, 오바마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국무장관 임명에도 찬성했다. 라이스가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이라크 전쟁을 추진한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데도 말이다.

원래 오바마는 상원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일정을 요구했지만, 막상 2006년 6월에 철군 일정을 담은 수정 결의안이 제출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2006년 민주당 총선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조 리버만이나 네드 라몬트 같은 친전쟁 후보들을 지지했다.

사실, 오바마는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일부] 철군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수를 줄이면 더 많은 군대를 이라크 북부와 중동의 다른 곳

오바마의 ‘새로운 미국’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군대를 재배치하면 나토의 병력 증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테러리즘에 맞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투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랠프 네이더가 좌파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네이더가 ‘진보진영’의 표를 분열시킨다고 공격하며 그가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네이더가 대선 후보로 나설 권리를 방어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양대 정당에 대한 그의 비판에 동의한다.

국내적 · 국제적으로 새롭고 진보적인 미국에 대한 약속은 오바마와 민주당의 정치로는 이뤄질 수 없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은 매우 유사한 정책을 펴 왔다. 양자 모두 대기업들의 정당이다.

그러나 미국 정당 정치의 이상한 구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의 기층 참가자들은 새로운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정당 구조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쓰디쓴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뿐이다.

랄프 네이더

» 4면에서 이어짐

할 수도 없다.

수많은 위기와 모순을 겪고 카스트로 정권은 살아남았다. 쿠바 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카스트로 정권의 안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카스트로가 진정한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인들은 막강한 미국의 온갖 공격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저항 — 비록 아직 개별적이거나 소규모인 저항에 한정돼 있지만 — 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령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익숙한 이 위계적 정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카스트로의 쿠바는 모순으로 가득하다. 한때 식민지적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작은 섬이 세계시장의 규칙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카스트로와 그 동료들은 한때 대중적 지지를 받는 — 대중이 능동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 혁명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정체된 관료들이 됐다.

쿠바의 현 지배자들이 1990년대 경제 이행기를 감독했다. 일부는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다른 자들은 유럽을 우방으로 보고 있다.

쿠바 정권이 추구하는 또 다른 전략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경제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전히 주권과 자주성의 상징이다. 문제는 카스트로의 후계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추천 도서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마이크 곤살레스
책갈피

가격 : 7,800원



이명박의 ‘재벌천국’, ‘강남 땅부자’ 시대의 개막

전지운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통차가 덮쳐 온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5년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게 그런 경우다.

이명박 취임식 날 신문은 재벌들의 취임 축하 광고로 도배됐지만,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학생들은 경찰 폭력에 가로막혀 취임식장 근처에도 못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은 거듭 “실용”과 “선진화”를 들먹였지만, 이명박 인수위는 두 달 동안 ‘반동’과 ‘후진화’만을 보여 줬다. 이명박 인수위는 자이툰 파병 연장과 한미FTA 등 노무현의 개악을 인수하고 추가로 반동적 개악들을 시작했다. 이명박 인수위의 성과라고는 ‘오렌지’의 발음을 ‘오렌지’로 교정한 것 정도밖에 없다.

인수위 기간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분명하다. 먼저 ‘재벌 프렌들리’ 정부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재벌과 특히 이견회의 소원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은 “[감찰] 수사로 기업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견회를 감쌌다. 한국타이어에서 이윤을 위한 노동자 ‘연쇄살인’의 진실은 덮여졌다.

이명박 정부는 또 ‘조지 부시 프렌들리’ 정부다. 당선 후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파병 재연장안 통과였다. <뉴스위크>는 이명박을 “위성된의 거리낌없는 친구”라고 했다. 미국 상·하원은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며 기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부정부패 프렌들리’ 정부다. 이명박 자신이 부패의 화신이며, 인수위 관계자들이 인천시에서 수백만 원 대의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첫 외교 성과라는 ‘루르드 유전 계약’에서는

최규선이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 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부패 스캔들의 주역이 돌아온 것이다. ‘고소영 S라인’(고려대·소망교회·영남·서울시청 출신) 논란은 음험한 인맥 속에 만들어진 부패의 지뢰밭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 프렌들리’ 정부다. 이경숙, 한승수 등 전두환 국보위 때의 인물들이 등장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김성이는 전두환에게 훈장을 받았던 게 드러났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부’ 논란도 불거졌다. 이명박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은 노무현 초대 내각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9억 원이다. 장관 후보들은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3~4채씩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이고, 병역 면제율도

50퍼센트에 달한다.

오물투성이 대통령에 걸맞은 의혹투성이 내각이기도 하다. 한승수(총리)와 박은경(환경부)은 위장전입과 땅 투기 의혹이, 김성이(보건복지부)는 공공 유용 의혹이, 박미석(사회정책수석)은 논문 표절 의혹이, 남주홍(통일부)은 부당공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영’과 ‘강부자’

이처럼 더러운 본색이 거둬 드러나면서 이명박 인수위는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0퍼센트나 하락하며 끝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었다. ‘취임도 전에 레임덕’이란 말까지 나왔다.

더구나 이명박에게는 불행하게도 맞바람



이명박 취임식 행사장 앞에서 열린 장기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 - 이명박 시대는 반이명박 투쟁과 함께 시작됐다

이 불어오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1월 무역수지는 33억 달러 적자였고, 반도체 수출도 5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중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요즘 ‘7퍼센트 성장·일자리 3백만 개 창출’ 얘기를 거의 안 한다.

“경제를 살려 잘 살게 해준다”던 이명박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부패 문제가 결합되면 그 폭발력은 배가될 것이다. 비록 이번에는 BBK특검이 삼청각에서 꼬리곰탕 먹으며 덮어 줬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 앞에서 등롱금 인상에 항의하던 학생들은 싸움을 연행됐고, 검찰은 이명박 당선 후 4월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다. 정동부는 친북 계시물을 이유로 진보단체들을

경찰 고발했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실천연대 송현아 씨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도 늘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해 범국민행동의 날을 폭력 봉쇄한 어청수를 경찰청장으로, 2006년 평택 시위 때 무장 병력 투입을 주장했던 이상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명박은 어청수에 게 “경찰이 시위대에 매맞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경찰에 맞아 사망한 하중근·전용철 열사 같은 비극의 재발 가능성을 껴 갖겠다.

〈조선일보〉양상훈도 “벽에 충돌한 다음에야 멈출” 듯한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을 걱정했다. 최근 이명박의 반동 덕분에 죽어가던 통합민주당이 생기를 되찾고 있지만, 17대 국회 내에 한미FTA를 꼭 통과시키겠다는 손학규의 통합민주당은 이명박의 브레이크가 아니다.

노동자·민중 운동은 이명박 불도저를 가로막을 거대하고 단단한 투쟁과 연대의 벽을 공동전선들을 통해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이 일으키는 노동자 구속의 회오리바람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반노동자 정부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 탄압의 회오리바람은 이명박의 고향, 포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파업 이후 포스코의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려 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전개하자 경찰이 박신우 지부장과 김세만 부지부장을 구속해 버린 것이다.

또한 경찰은 흠애버 포함 점 개장 한

배신과 개악의 노무현 5년

이명박은 취임식에서 “특히 지난 5년 간 수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인수위 대변인 이동관이 실도했듯 “노무현 때 집 값 올라서” 큰 득을 본 것도 이명박 내각의 ‘강부자’들이다. 이명박 자신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하루 9백만 원씩 재산이 늘었다.

반면 노동자·민중은 노무현을 증오할 이유만 수두룩하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사회 양극화는 더욱 벌어졌고 비정규직은 거의 매년 30만 명씩 증가했다.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 한미FTA, 노동법 개악 등 이명박 불도저가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줬다. 이명박은 반노무현 반사익의 공동전선들을 통해 건설해야 한다.

의 최고 수혜자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박일수·이용석·류기혁·정해진 열사 등이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하며 죽어갔다.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다. 하중근·전용철·홍덕표 열사가 경찰 폭력에 사망했다. 허세욱 열사는 한미 FTA에 맞서 자기 몸을 불살랐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노무현이 추진한 ‘기억하기 좋은 나라’는 이견회 같은 비리 재벌과 한화 김승연 같은 조폭 재벌, 룬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멋대로 날릴 수 있는 나라였다.

역사는 노무현 5년을 배신과 개악의 5년, 위선과 사기의 5년, 민주주의가 후퇴한 5년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의 앞날에 좌절만이 가득하길 저주해 마지않는다.

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 경북본부 이전락 본부장을 구속했고, 2006년 포항건설노조 파업으로 수배중이던 배성훈 사무처장마저 구속했다. 1월 28일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으려 들 전교조를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2월 13일 충남 아산에서는 경남제약 직장 폐쇄에 항의해 지역 연대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정월영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들을 구속했다. 울산에서는 삼성SDI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연대파업을 조직한 박춘곤 전 대덕사회장을 구속했다.

2월 15일 청주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깨고 ‘배차권’을 이용해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던 건설업체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충남건설기계지부 이용대 지부장을

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을 구속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0일 김태범 건설노조 토목분과 위원장과 조병규 인천건설지부장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정해진 열사 분신 현장에서 경찰에게 쏘아냈던 항의가 “공권력에 도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전과 14범으로 BBK 주가조작 등을 저지른 이명박이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때 많은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밥 먹듯이 파기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기업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만 구속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법과 질서’를 존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유청하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강동훈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퍼센트였고, 수입 물가는 21.2퍼센트나 폭등했다. 이런 수입물가 인상률은 IMF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CJ 등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24~34퍼센트 올리자, 2월 20일부터 라면·스낵 등이 평균 11.3퍼센트 올랐고 이 때문에 대형 마트 등에서는 라면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장면도 5백 원 올랐고, 주요 피자업체들은 일제히 1천 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올라 멸절한 남의 집 대문까지 뜯어다 고철로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철근 가격도 지난 1년간 48.3퍼센트 상승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생활필수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실질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내 노동자·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질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과 세계 지배자들이 추진해 온 전쟁·신자유주의가 지금의 물가 인상을 낳았다. 부시 일당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유가를 끌어올렸다. 물론 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대해 온 산업 수요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것이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5년 20킬

로그램에서 2006년 50킬로그램으로 늘었는데, 이러한 육류 소비 증가는 사료용 곡물 수요를 확대해,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다.

반면, 주요 곡물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상이변으로 밀 생산량이 2005년에 2천5백만 톤에서 2006년에 9백80만 톤으로 급감하는 등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본적인 수급 불균형에 더해 미국의 소비 확대에 위태롭게 의지해 성장해 온 세계경제 체제에 문제가 생기며 최근의 석유·곡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유가 상승을 분석한 <유가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석유의 수급 불균형은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2.2퍼센트 정도 기여한 반면, 달러 약세와 투기 자금의 유입은 유가 인상에 각각 11.1퍼센트와 30.4퍼센트의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이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엄청난 투기 자금이 원료로 물리면서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요 산유국

들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보는 손실을 만회하고자 석유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중앙은행)는 경기 후퇴를 우려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석유·곡물 등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엄청난 양의 곡물이바이오 연료 생산에 쓰인 것도 곡물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유가가 오르면서 바이오 연료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오 연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밀·대두 등의 재배 면적은 감소했다.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 14억 에이커(약 5조 6천6백억 제곱미터)의 땅이 바이오 연료용 곡물 생산지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옥수수 생산의 3분의 1이 바이오 연료에 사용된다. 2007년에는



전 세계 재고량의 절반인 3천만 톤의 옥수수가 추가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됐다.

2007년 1월에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수만 명이 주식인 옥수수 가격 상승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값싼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 때문에 멕시코 옥수수 농업이 파괴됐는데, 미국이 바이오 연료 생산을 늘리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다.

폭등

이런 국제적인 물가 인상 때문에 기름값, 통신비, 사교육비, 보육비 등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퍼센트 이상 끌어올렸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정책 집행도 하기 전에 좌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둔 경제 분석과 전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인상에 대응해 원유와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사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

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임만 열면 ‘규제 완화’를 말하더니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기업’적이고,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다. 이미 인수위가 기름값·통신비 인하, 신용불량자 지원을 추진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물러선 바 있다.

되레 이명박의 영어 ‘몰입’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개악은 사교육비 폭등을 낳으며 서민의 고물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SK에너지의 영업이익은 1조 4천8백44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27퍼센트나 늘었고 GS칼텍스·에스오일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었지만, 인수위는 정유사들의 이윤에 대한 통제는 고사하고 정유사 가격정보 공개도 추진하지 않았다.

“대학 자율”을 추진하고 “땅을 사랑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사유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도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이 책임지도록 만든 것이다.

통신기업·정유사 등의 국가 통제와 국유화로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사회화 반대·임금 인상 등을 위해 싸울 때만 ‘서민 경제’를 지킴수 있다.

이명박 취임식장 옆에서 켜 빨간 경고등

이명박 취임식장의 역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취임식장 바로 근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에 맞선 싸움을 다짐했다.

경찰들은 기자회견 장소로 가는 참가자들을 에워싸 20분 동안 ‘감금’하고 위협했다. 그러나 경찰 병력에 고립된 참가자들이 큰 소리로 “우리는 살인적인 등롱금 인상과 청년살인,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말할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고 외치자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오히려 오히려 지지를 보냈다.

경찰 책임자는 “위에서 지켜서 막는 거다”라며 발뺌했지만, 참가자들이 “이명박이 시켰?”고 다그치자 결국 기자회견을 허용해 줬다. 7개의 대학생 단체들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화를 증대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과 강제 ‘영어몰입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는 1백여 명이 넘는 대학생과 교사,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강민욱 한대련 의장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에 공부하려 왔는지 돈벌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교육비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는 자리였다.

한수영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크리스 하먼

자본주의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바로 내년에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 지배계급들은 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기업의 연쇄 파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불황이 미칠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요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2주 전에[1월 하순경] “나는 지금 금융 체제의 취약성과 기업 중역들이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이 결합돼 가장 중요한 것, 즉 시장경제 자체의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당할까 봐 두렵다” 하고 고백했다.

그가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누구든 “대중 자본주의”를 믿었다면, 지금은 그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스코티시 위도우 생명보험은 지난주 소액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한 주식중개인이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지만 주가가 폭락하자 유럽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떼 제레랄이 거의 파산할 뻔했다.

사람들은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노년락 은행의 주주인 한 투기성 단기자금 회사에 5백억 파운드[93조 7천8백25억 원]를 지원하면서도 로버 자동차 회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20억 파운드[3조 7천5백13억 원]는 지원하지 않았던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 그럭저럭 만족한다고 답했을 사람들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는 대중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오랫동안 연기금에 돈을 납입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가치가 폭락한다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가장 크게 분노할 사람들 중 일부는 보

통 노동계급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다.

30년 동안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일주일 중 5일 심지어는 6일 동안 사장의 죄수처럼 살아온 노동자가 어느 순간 자신이 “불필요한 잉여”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예상되는 가장 흔한 반응은 아마도 ‘격노’(激怒)일 것이다.

이 때문에 마틴 울프 같은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가 떠오를까 봐 염려한다.

정치적 대응

그러나 경제 위기는 계급투쟁에 모순된 영향을 미친다.

실업에 빠진 이후 즉시 분노가 폭발해도 그것이 오래지 않아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대중이 서로 반목하기 시작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영국의 경제 위기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대공황기였던 1936년, 프랑스 점거 파업 노동자들

1979년 마가렛 대처가 권력을 잡은 뒤 2년 동안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전국 철강 노동자들은 16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심지어 우파 노조 지도자들까지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대량 실업이 노동계급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이것은 1984년 광부 파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위기를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주들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위기가 자동으로 반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위기는 분노를 낳지만 그것이 사기 저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전환돼야 한다.

오늘날 1930년대는 ‘배고픈 30년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적 환멸과 분노는 전 세계적으로 좌파적 대중 운동을 만들어 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고, 프랑스에서 대중 파업이 벌어졌고, 스페인에서는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다.

현재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금융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금리를 최대한 높게 유지해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막는 동시에, 공공부문 대출을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지출은 억제될 것이고, 특히 임금 인상이 억제될 것이다.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대략 10퍼센트 정도의 물가인상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결합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파업은 사회에 축적된 분노에 초점을 제공하고 계급적 분단선에 따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저들 대 우리”라는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파업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를 좌파들에게 제공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기업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파 신문과 정치인 들은 이주민과 난민 들에 대한 공포를 선동해 대중의 분노가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애를 쓸 것이다.

오늘날 좌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먼저 자본주의가 미친 체제이며 그것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둘째로, 왜 노동조합이 임금 동결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작업장들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일체에 개입하면서 서로 다른 투쟁들 사이에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만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간통죄로 입건된 배우 옥소리 씨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담당 판사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주장했듯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간통죄의] 부작용은 명백”하므로 간통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를 유지해 “가정 파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통죄는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는 이유로 배우자를 감옥에 처넣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리 없다.

또, 간통죄가 1백 년이 넘도록 존재했지만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현실을 제어하지도 못했다. 〈한겨레21〉이 200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의 42.2퍼센트, 여성의 19.9퍼센트가 배우자 외의 ‘애인’을 사귀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남성의 67.7퍼센트, 여성의 12.3퍼센트가 ‘혼외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 간통죄는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간통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가 적용된다. 돈이 많으면 충분한 위자료 지급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998년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 중하류층은 75퍼센트인 반면 상류층은 0.7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돈’으로 ‘배타적 소유욕’을 보상받도록 해, 인간관계를 더욱 뒤틀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간통죄가 결혼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통죄의 역사는 여성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908년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유부녀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된 간통죄는 여성의 성을 규제

해 부계 혈통을 보호하는 구실을 했다. 1953년 쌍벌죄로 개정되긴 했지만, 이것은 ‘정실’ 여성들의 권리만 인정할 뿐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첩’이 된 여성들에게 도덕적 낙인과 처벌을 가했다.

또, 2005년에 실행 선고까지 이어진 간통 고소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남편이 부인을 고소한 것이다. 간통죄는 여성을 억압하는 보수적 성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반여성적인 법률이다.

진정으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비정규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가족 수호’를 핑계로 성을 억압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류민희

맑스와 《자본론》 ④

왜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필연인가

이 글은 《자본론》 연재 기사 마지막 편으로, 자본주의가 위기로 치닫는 경향에 대해 알아본다

조지프 추나라

이전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분열, 즉 생산을 통제하는 자본가 계급과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노동자 계급 간의 분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체제에는 또 한 가지 분열이 존재한다.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들 사이의 분열이 그것이다. 이들은 착취의 전리품과 시장 지분을 놓고 서로 끊임없이 싸운다.

이들 사이의 경쟁은 생산 과정에 반영된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더 크고 빠르고 성능 좋은 기계에 대한 투자가 일반적이다.

맑스가 ‘자본 축적’이라고 부른 이 과정 덕분에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경제 체제가 됐다. 또한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체제이기도 하다. 경쟁자들만큼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지 못하는 자본가는 이윤이 줄어들어 결국 도태된다.

그렇기에 작업장 안전이나 연금 또는 환경보호 규정처럼 이윤에 걸림돌이 되고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모두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윤과 축적을 향한 자본주의의 눈먼 질주는 위기를 촉발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가 시장을 지배한다.

자본가들은 이윤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르르 몰려가서 투자한다.

이 때문에 갑자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과잉 생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납품업체는 파산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소비재 생산 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위기의

근원에는 더 근본적인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전의 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맑스는 ‘산 노동’과 ‘죽은 노동’을 구별했다. 산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죽은 노동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축적은 보통 산 노동에 대한 죽은 노동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단순하고 값싼 기계로 하루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가정하자.

그들이 몇 년 뒤에 더 비싼 최신 기계로 하루에 자동차 열 대를 만든다 해도 그들이 투입한 산 노동의 총량은(따라서 창출

되는 가치는) 이전과 동일하다.

물론 개별 자동차의 가치는 하락한다. 각각의 차에 투여된 산 노동의 양이 줄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 들인 기계가 이전의 것보다 10배 내지 1백 배 비싸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자본가가 버는 이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가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즉 ‘이윤율’이 하락한 것이다.

물론 새 기계에 맨 처음 투자한 자본가는 가격 경쟁에서의 우위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이 너도나도 새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최종 생산품의 가격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윤율은 계속 떨어지지는 않는다. 《자본론》 제3권에서 맑스는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여러 요인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윤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재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호황기에 비해 한참 낮은 상태다.

이윤율이 하락하면 체제 전체[세계자본주의]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격화하고, 자본가들의 뒤를 따르는 국가들 간의 경쟁도 격심해지면서 경제적 갈등뿐 아니라 군사적 갈등도 고개를 든다.

노동자들은 더 심하게 쥐어짜이고, 이전 세대의 노동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들(연금, 의료 서비스, 무상교육 등)이 공격받는다.

또한, 기성 정당들이 대중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도 극우파와 극좌파 사이에서 양극화된다.

파시즘, 대량 실업, 전쟁으로 얼룩진 1930년대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어떤 야만을 잉태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 줬다.

현 시기는 1930년대보다 경제 위기가 더 질질 늘어지고 있다. 1930년대와 동일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 전개 속도는 더 느린 것이다.

또, 이번 위기가 1930년대처럼 대참사를 통해 해결되고야 말 것도 아니다.

1930년대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서, 자본주의의 부를 창조하는 자들이 그 부를 장악해 자본가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식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 맑스의 《자본론》은 이를 위한 투쟁의 지침서다.

서른한 살의 조지프 추나라는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집사인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자 가운데 한 명이다. 중미 선주민계인 그는 흥미롭게도 케임브리지대학교 물리학 박사 출신이다.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지음
프레스인북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동네 병원에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살가죽만 겨우 남은 양상한 백발 노인이 찾아왔다. 병원까지 고작 백여 미터 거리를 한 시간 동안 걸어 왔다는 그는 막노동 일감이 없고 돈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었다고 했다. 병원에 오자마자 “밥 좀 달라”던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40대 중반이었다.

우리 병원 단골인 관절염이 심한 한 할머니는 파지를 주워 판 돈으로 손녀를 키우고 사신다. 1회 진료비는 겨우 1천5백 원이지만, 비 오는 날이면 돈을 벌지 못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한다.

한국의 병원은 거의 다 ‘비영리법인’이고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돼 있지만,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위에 소개된 ‘국민’을 무상으로 진료하면 ‘불법호객행위’로 처벌받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 책은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난한 환자들을 병원이 어떻게 쥐어짜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 폭로하는 훌륭한 설명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인 비급여 문제, 불법 의료비 청구의 대명사 선택진료비, 환자가 백전백패하는 의료 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밥장사·방장사로 돈 버는 병원들의 문제를 포함해 병원 감염, 의료 광고, 민영보험 문제와 한미FTA가 가져다 줄 어두운 미래까지 의료 자본과 정부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조목조목 폭로한다.

저자 자신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망가진 몸도 아랑곳 않고 이런 실태를 바꾸기 위해 투쟁해 온 훌륭한 활동가이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그는 백혈병을 앓으며 “한 달 약값만 3백만 원이나 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건강의 계급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소득의 하위 20퍼센트 층이 상위 20퍼센트 층보다 암 발생률이 남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가 높고, 암 진단 후 3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06배, 여성이 1.49배가 높다.”

“열악한 노동시간과 환경,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돈 없는 사람들은 병에 더 잘 걸리고, 병에 걸리면 더 많이 죽는다.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하고,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저자는 같은 질환의 환자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끈질기게 항의해 부당 청구된 병원비를 단돈 몇만 원이라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놓은 덕분에 나도 유방암 수술을 했던 어머니께 영수증을 챙겨 놓으라고 말씀드렸다. 어쩌면 부당 지출된 수술비를 환급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문제의 근원인 계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적 처방일 것이다.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을 내걸고 파업을 할 때, 교섭에 나왔던 한 병원장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자들에 맞서 가난한 환자와 노동자들이 연대해 의료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전현정(성동건강복지센터 사무국장)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를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3월 3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 관한 전망

전지윤 동지의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는 제목에서 제시한 내용을 잘 정리해 준 글이었다. 그러나 기사 중 “이명박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커지면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얼마나 반사이익을 얻을지는 의문스럽다”는 서술은 모호하다. ‘반사이익을 얻되 조금밖에 못 얻을 것’이라는 예측인데, 내 생각에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중 통합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먼저 노무현 향수에 의한 반사이익이다.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우경화 행보가 지속되고, 민주노동당이 강력하지 못할 경우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것이다. 2004년 탄핵 반대 시위

때도 1차 수혜자는 열우당이였다.

또 ‘대표야당’으로서의 반사이익이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의 정부개편안에 제동을 걸었고,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 주장, 땅부자 내각 비판으로 왼쪽 압박이를 컸다. 사람들은 이명박을 견제하려는 생각 때문에 통합민주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창조한국당은 대선에서도 5.8 퍼센트 득표에 머물렀다. 더구나 총선 후보도 거의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반 동안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확률은 매우 적다. 따라서 나는 통합민주당의 위선에 대해 (이명박만큼은 아니더라도) 신경쓰며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형우

안형우 동지는 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메워 줬다. 다만 내 글의 취지를 다소 오해한 듯하다. 나는 분명히 “이명박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커지면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도 ‘왼쪽 압박이’를 커며 대중의 환상과 기대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썼다. 안형우 동지가 “모호”하다고 한 부분은 이들의 모순·한계를 지적한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진술을 “반사이익을 얻되 조금밖에 못 얻을 것”이라고 정리한 것은 너무 거친 요약이다. 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과 이들의 모

순·한계를 비판·폭로하는 것은 대립되지 않는다.

또, 안형우 동지는 이들 중 누가 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이것은 필요한 예측이지만 너무 단정적이지는 말아야 한다. 최근 이명박의 헛발질 덕에 통합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지만, 노무현 5년의 환멸이 그렇게 쉽게 망각되진 않을 것이다. 반면 문국현이 지난 대선 때 일부 NGO와 개혁 염원 대중에게 얻었던 기대도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문국현 지지층에도 개입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 준다.

전지윤

“우리의 연대여, 영원하라!”

[편집자] 한국에서 10년 넘게 이주노동자로서 일하고 투쟁해 오던 **미숨** 동지가 방글라데시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주노동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의해 아만직 표적 단속 추방을 당했다.

‘다함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이 보내 준 너무나 큰 지지와 연대 덕분에 오늘날 저 마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지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반전·반FTA·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 투쟁들을 통해 제 자신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처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할 일이고, 저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여, 영원하라! 우리의 연대여, 영원하라!



대학 맑스주의 포럼

교대·중앙대

3·8 국제 여성의 날 — 21세기 여성 해방

일시: 3월 4일(화) 오후 6시
연사: 이예송(‘다함께’ 활동가)
장소: 서울교대(추후 공지)
문의: 010-3163-1673

건국대·한양대

3·8 국제 여성의 날 — 21세기 여성 해방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류민희(‘다함께’ 활동가, 민주노동당 성평등교육 강사)
장소: 건국대(추후 공지)
문의: 010-6876-5349

고려대

3·8 국제 여성의 날 — 21세기 여성 해방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송선화(이랜드일반노조 대의원), 정진희(‘다함께’ 활동가)
장소: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1-9952-6288

서부대학 통합

3·8 국제 여성의 날 — 21세기 여성 해방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연사: 윤송단(이랜드일반노조 여성국장), 최미진(‘다함께’ 활동가)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문의: 010-2263-1106

한국외대·경희대

삼성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일시: 3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장소: 한국외대(추후 공지)
문의: 011-9937-1755

시립대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일시: 3월 6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강동훈(주간 <맞불> 기자)
장소: 배봉관 115호(6-115)
문의: 010-6838-1968

단국대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6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제2공학관 101호
문의: 010-3555-0773

지역 사회 포럼

서울 남부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5일(수) 오후 8시
연사: 김광일(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다함께’ 운영위원)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사무실(이수역 7번 출구에서 50미터 거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02-2271-2395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이랜드 점거 파업 동참은 정당했다

지난 여름 점거 파업을 벌인 이랜드 조합원과 연대 대오에 대한 재판이 속속 열려 개인당 30만원, 50만원 등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2차 점거 때 강남경찰서에 연행됐던 나는 지난 2월 13일 같이 연행됐던 학생·노동자 9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 분위기는 활기차고 당당했다. 많은 이랜드 투쟁 지지자들이 재판을 방청했고, 내가 재학 중인 교대에서도 새내기를 포함해 7명이나 참가해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자신감

재판 받은 동지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이랜드 문제가 자신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과 연관돼 있고 따라서 점거 파업에 동참한 것은 정당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해, 다른 동지들과 방청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법원은 벌금형으로 우리를 위축시켜 앞으로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고 눈물 흘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벌금으로 내 심신을 옥죄더라도 나는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다.

조익진(서울교대 학생)

이명박 시대로 이어진 뉴코아·이랜드 투쟁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스콤 비정규직, 기통전자, 한국합섬,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집중 투쟁을 했다.

이명박 취임식 당일 오전에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국회 앞에서 “기업은 프렌들리 노동자는 찬밥 신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옥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싸우니까 힘이 난다. 일주일 동안 한 집중투쟁의 교훈은 3월에도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며 이명박 정부와 맞서 굳건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8개월째 굳건히 투쟁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랜드그룹에 심대한 매출 타격을 입혔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생계비 곤란과 건



이명박 취임식장 근처에서 집회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강 악화 등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탈퇴는 하지 않고 있어 회사 측의 노동조합 죽이기는 실패하고 있다.

게다가 이랜드그룹은 불법 주류 판매, 2001 아울렛 불법 세금 포탈, 홈페이지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궁지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연맹이 이랜드그룹을 지원

하는 금융권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운동을 결의하는 등 지속적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중 투쟁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큰 기여를 했다.

민주노총은 3월에도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동 투쟁을 조직해 연대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한다.

최영준

여수 화재 참사 1주기 집회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보여 주다

이명박 취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서울 도심에서 1천 명 가까운 한국인·이주노동자 등이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여수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 이후 3개월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농성 투쟁단’은 이 집회를 열의있게 조직해 왔다.

이날 집회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지독한 탄압에도 이주노동자들의 투지와 저항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줬다.

무엇보다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이날 집회에 대거 참가했다.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GM대우 등 장기투쟁사업장 공동 투쟁단 노동자들이 참가해 단결을 과시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이랜드일반노조 이남신 수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한국 노동자들의 대거 참가와 성공적 집회 진행에는 무엇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노력과 기여가 컸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1백5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성동광진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와 ‘경기이주공대위’ 등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운동 연합체들이 참가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한 대구 금속노조 삼우정밀 지회도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지회의 인도네시아 조합원들은 모금을 해 ‘농성투쟁단’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이랜드 노조도 장기 투쟁 때문에 생계비 지급이 어려움에도 투쟁기금을 전해 줬다.

이런 연대는 노조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이주노조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우리는 이번 집회의 성공에 힘입어 이명박 시대에도 곳곳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코스콤비정규직부 투쟁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월 22일에는 정인열 부지부장을 비롯한 3명이 “이명박은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단병호 의원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는 경호권을 발동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코스콤 조합원 18명은 이명박 취임식에 참가 신청을 해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행사 위원회는 며칠 후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잘못 발송된 것”이라며 초청을 취소했다.

연대

이명박 취임식 날 경찰은 4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코스콤 노동자들과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의도 농성장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코스콤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무금융연맹의 연대도 여전하다. 최근 현대증권노조는 사측에게 코스콤과의 퇴직연금시스템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연대가 이어지면 코스콤 사측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절한 투쟁이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이끌게 될 것이고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코스콤 노동자들의 저항은 이명박 시대에도 계속된다.

태안과 사회 정의의 파괴자 이견회를 처벌하라

장호중

이미 주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22일 태안에서는 30대 여성 가장이 생활고를 비판해 자살을 시도했다.

손톱이 썩고, 코가 물러지고, 목이 가라앉는 등 사고 초기에 원유에 직접 접촉하거나 휘발성 유독 물질을 많이 들이마신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사고 처리에만 급급해 방제복 대신 방진복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언론에서 초기 방제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제는 유해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현장에 내보낸 뒤 소변을 채취하고 있

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없애 버려 현지에는 사고 처리를 담당할 정부 기관조차 없는 상태다.

면죄부

한편, 사고가 난 지 78일이 지나야 국회에서 태안 유류사고 특별법이 통과했다. 그러나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고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쫓 빼놓은 엉터리 특별법을 만들었다.

주범에게 면죄부를 준 마당에 유조선 선주 측이나 보험사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세금으로 이를 메우거나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는 황당한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의 피해보상 선지급도 의무가 아닌 ‘임의’로 규정해 두었다.

삼성 특검 수사에서도 딱값 정치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견회 일가를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 자신들이 국가기관을 지배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삼성은 법 밖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그래서 수사를 하기 힘들다” 하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의지도 의문스럽다. 특검은 ‘차명계좌’ 운용의 주범이자 이명박 인수위 자문위원인 황영기의 출국금지를 풀어 줬다. 무엇보다 특검은 부패의 핵심 고리인 검찰·국세청·재경부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다. ‘삼성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검 수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이견회·이명박·관료 동맹에 맞서 태안 주민들과 반이견회·반이명박 운동 세력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3·8 국제 여성의 날 1백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자

최미진

1백 년 전 미국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 때도, 1910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할 때도,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때도 그랬듯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했고 남성들과 함께, 때로는 남성들보다 앞장서서 투쟁했다.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의 중요한 부문에 더 많이 진출해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로 진출하면서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의 삶은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여성들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들의 6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대부분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어 여성들은 직장가 가정이라는 이중의 굴레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가중시킨다.

‘테러와의 전쟁’ 7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전쟁의 참화 한가운데서 고통받

았고
무슬림 여성들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슬림 마녀사냥의 속죄양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심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 여성의 날 1백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된다. 매년 한국의 3·8 집회가 여러 군데로 분산돼 치러졌지만, 올해는 민주노총과 NGO여성단체들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행사를 치른다. 올해 국제 여성의 날 집회에는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 등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의 날 집회는 신자유주의와 파병을 밀어붙일 이명박의 취임 직후에 열리는 집회이기도 하다.

오늘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모두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투쟁의 주인공으로서 여성들이 결집하는 여성의 날 행사에 함께 참가하자.

국제 여성의 날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

이예송

해마다 3월 8일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2008년은 국제 여성의 날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영감을 준 1908년 미국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벌어진 지 1백 년이 되는 해다.

1908년 3월 8일 수백 명의 직물공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 텃거스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아동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했고, 노조 결성의 자유와 여성 투표권을 요구했다. 대부분 이민자였던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듬해 “2만 명의 반란”으로 알려진 13주 연속 파업으로 폭발했다. 파업에 참가한 여성들의 전 투성은 아주 놀라웠다.

많은 파업 참가자들이 10대였고 일부는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깡말랐고 일부는 굶주려 몹시 허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추운 겨울 내내 휴먼지와 눈보라를 맞으며 피켓팅(파업 농성 출입 통제) 대열 속에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구타와 폭행으로 온몸이 멍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업을 방아했다.

이 파업 노동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획득했다.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평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독일의 혁명가 클라라 체트킨은 1910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에서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노조 결성권과 투표권을 위한 노동계급 여성 투쟁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체트킨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통해,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와 전

투성을 계승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계급 여성으로서 의식과 조직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랐다.

1911년 3월 유럽에서 열린 첫번째 국제 여성의 날 시위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성의 날 시위에 참가하려는 여성들로 도심이 꽉 막힐 정도였다. 독일의 많은 대도시에서 최대 3만 명의 여성이 행진에 참가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국제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에서 열린 것이었다. 1917년 3월 8일(러시아 구력으로 2월 23일) 전쟁으로 큰 궁핍에 빠진 여성 노동자들은 국제 여성의 날을 기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시위는 전체적인 짜르(러시아 황제) 체제를 무너뜨린 혁명을 이끌었다.

그 후 소비에트의 10월 혁명으로 들어

선 새로운 노동자 정부가 발표한 법령은 여성 해방의 꿈을 현실로 바꾸려는 최초 시도였다.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고용 평등과 동일임금을 법으로 보장했다. 자유로운 결혼과 이혼이 가능해졌다. 세계 최초로 낙태가 합법화돼 국립 병원이 무료로 낙태 시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식당, 공동 세탁소, 탁아소, 유치원 등 그동안 여성을 짓눌러왔던 가사노동을 사회가 책임지는 조치들이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 가장 발전한 서구 자본주의 나라조차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3·8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었다. 오늘날 여성들은 1백년 전보다 더 많이 사회에 진출했고, 더 많은 투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진정한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은 3·8 여성의 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국제 여성의 날 1백주년 기념 행사

● 3·8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월 8일(토) 1시 30분 / 시청광장

주최: 민주노총

● 3·8 여성축제

3월 8일(토) 1시~5시

시청광장 및 청계천광장 일대

주최: 세계여성의 날 1백주년

3·8 여성축제 조직위원회